



주간통일정세 2010-51(2010.12.13~12.1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5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김정일·정은 부자, 군인들 공연 관람(12/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제34차 인민군 군무자(군무원)예술축전에서 당선된 7개 군부대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통신이 보도
  - 김 위원장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피바다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등의 공연을 본 뒤 “혁명적 군인문화를 온 사회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밝힘.
  - 리영호 당 정치국 상무위원(군 총참모장·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 당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최태복·홍석형(당 비서 겸직), 김경희(당 부장 겸직), 강석주(내각 부총리 겸직),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김양건·김영일·최룡해·박도춘·태종수·김평해(당 비서 겸직), 문경덕(당 비서·평양시당 책임비서 겸직), 주규창(당 부장 겸직), 박정순(당 제1부부장 겸직), 당 중앙군사위 위원인 김경욱·김원홍·김명국·김영철·윤정린 등이 수행
  
- **연평도 포격 때 北김정일은 태연히 공장 시찰?(12/13, 노동신문)**
  - 지난달 23일 오후 북한 인민군이 연평도에 포격을 퍼붓던 바로 그 시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시내 룡성식료공장을 시찰중이었음을 암시하는 글이 신문에 실림.
  - 이날 신문은 ‘창성 땅에 불길이 타올랐다’라는 제목의 ‘정론’서 “얼마 전 룡성식료공장을 돌아보신 장군님(김정일)께서 인민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창성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가셨다”면서 “바로 그 시각은 원수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된 순간이었다”고 언급함.
  - 이는 연평도에 주둔한 우리 군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사격을 해 대응 포격을 가한 것이라는 북한 측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
  - 실제로 11~12월을 통틀어 김 위원장이 평양 시내 룡성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한 것은 연평도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8시 53분에 나온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유일함.
  - 통신은 당시 김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신설된 룡성식료공장의 간장 생산라인을 현지도했다고 전했으나, 김 위원장 동정을 하루 늦춰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



에 따라 전날인 22일 상황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北김정일, 6자회담 전제조건 사실상 거부(12/14,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주 방북한 중국의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상을 전제 조건 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통신이 이날 베이징의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긴급협상에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 개최가 한층 어렵게 된 셈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 또 김 위원장은 다이 국무위원에게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한국의 민간인 2명이 숨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포격 자체는 한국의 군사 훈련에 대한 ‘자위적인 대항조치였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중 양측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유관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 각 측과 노력해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반년 만에 모습 보인 北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12/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관리총책’으로 알려진 전일춘(69) 노동당 39호실장이 6개월 만에 북한매체 사진에 모습을 드러냄.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가 이달 12일, 김 위원장이 평양의 선홍식료공장, 고급식당 ‘향만루’ 등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전하며 함께 내보낸 사진에서 김 위원장 바로 옆에 서 있는 전일춘의 모습이 잡힌 것임.
- 반년 만에 나온 이번 전일춘 사진은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 리스트에 노동당 39호실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됨.
- 전임 39호실 실장 김동운은 작년 12월 22일 유럽연합 환경이사회에서 장성택(당 행정부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등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 대외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경질된 것으로 알려짐.
- 김 위원장의 고교(평양 남산고급중학교) 동창인 전일춘이 39호실 책임자로 임명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하지만 대북 소식통들 사시에 39호실장 ‘경질설’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초순부터임.
- 김 위원장의 원평대흥수산사업소(함경남도 금야군 소재)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2월 3일 중앙통신 기사의 고위급 수행원 명단에 전일춘



의 이름이 오르고, 사진 속에서 그의 모습이 잡힌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다.

- 원래 공개활동을 하기 어려운 '39호 실장' 전일춘이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의 선홍식료공장과 식당 '향만루' 시찰에 따라간 이유에도 관심이 쏠림.
- 김일성대 교수 출신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장소에는 설명을 담당할 사람이 반드시 수행한다"면서 "전일춘이 따라갔다면 39호실 업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함.
- 원래 김 위원장은 이들 두 곳 외에 평양밀가루가공공장도 같은 날 시찰했으나, 밀가루공장 시찰 사진에는 전일춘의 모습이 없었음.
- 한편 노동당 39호실은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평대홍수산사업소, 문천금강제련소, 대성타이어공장 같은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면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페) 제작,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짐.

#### ● 北김정일, 군부대 산하 뱀장어공장 시찰(12/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통신이 보도
- 통신은 그러나 뱀장어공장 현지지도 수행원 명단에서 김정은은 언급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종합조종지휘실, 분석 및 실험실, 실내 양어못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본 후 현대적인 양어장을 더 많이 건설해 민물고기 생산을 늘려 주민들에게 뱀장어를 비롯한 고급 어족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통신은 밝힘.
- 김경희(당 경공업부장 겸직),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장성택(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직), 최룡해·태종수(이상 당 비서 겸직),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수행

#### ● 北김정일·정은 부자, 34일 만에 군부대 시찰(12/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인민군 제2670군부대를 시찰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
- 김 위원장과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소식을 북한 매체가 전한 것은, 지난달 12일(인민군 제3875군부대) 이후 34일 만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70군부대의 '작전지휘실과 후방시설'을 둘러본 뒤 "군인들이 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 돌격대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부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함.
- 또 통신은 "(2670)군부대 장병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해 고도의 경각성을 갖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음.

- 리영호 군 총참모장(당 정치국 상무위원·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직),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당 정치국 위원·국방위 부위원장 겸직),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당 정치국 후보위원·당 행정부장 겸직)이 수행

● 北신문, 김정은 이름도 큰 글자로 표기(12/17, 라디오프레스)

-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을 다른 글자보다 약간 크게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북한 뉴스 청취·분석 전문기관인 라디오프레스가 보도
- 이런 표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 해당하는 10월 10일자 지면부터였다고 함.
- ‘민주조선’은 김정은의 이름을 다른 글자보다 크게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함.
- 통신은 북한이 일부 신문에서나마 김정은의 이름을 故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로 쓰는 것은 김정은을 다른 당 간부와 구별하는 징후로 보인다고 설명

■ 김정일동향

- 12/12 김정일, 제34차 인민군 군무자(군무원)예술축전에서 당선된 7개 군부대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
  - 김정은(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黨 정치국 상무위원), 김기남·최태복·홍석형(黨비서), 김경희(黨부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김양건·김영일·최룡해·박도춘·태종수·김평해·문경덕(黨비서), 주규창(黨부장), 박정순(黨 제1부부장), 김경옥·김원홍·김명국·김영철·윤정린(黨 중앙군사위 위원) 등 동행
- 12/14 김정일, 인민군 제522군부대 산하 대동강뱀장어공장 현지지도 (12/15, 중통·중방)
  - 김경희(黨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최룡해·태종수(黨비서), 현철해·리명수(국방총 국장) 등 동행
- 12/15,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 시찰(12/16, 중통·중방)
  - 이영호(총참모장), 김정은(黨 군사총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 부장),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 동행

■ 김정은동향

- 12/12 김정은, 김정일과 함께 제34차 인민군 군무자(군무원)예술축전에서 당선된 7개 군부대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
- 12/15 김정은, 김정일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670군부대 시찰(12/16, 중통·중방)



#### ■ 기타 (대내 정치)

- “당의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반제자주의 정치”라며 “첫째도, 둘째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것” 강조(12/13, 중통·노동신문)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12/13 오수옹(咸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궐기모임 진행(12/14, 중방)
  - 단천항·단천마그네사공장·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도 12/12~13일 라동희(육해운상), 곽범기(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각각 진행(12/14, 중방)
- 무산광산연합기업소·무산식료공장·함북예술단 종업원들, 12/13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각각 진행(12/15, 중방)
- 美 뉴멕시코주지사 ‘빌 리처드슨’ 일행, 12/16 평양도착 사실 간략 보도(12/16, 중통·평방)

#### 나. 경제

##### ● 연평도 포격 후 北 물가, 환율 폭등(12/13, NK지식연대)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전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북한 ‘장마당’(시장) 쌀값과 환율이 폭등해 주민들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이 단체가 이날 전함.
-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직전 북한 장마당에서 kg당 900원 하던 쌀값은 12일 현재 1천600원으로 77% 상승했고, kg당 400원이던 옥수수 가격도 600원으로 50% 올랐다고 함.
- 같은 기간 회령시장에서 중국 인민폐 환율은 1위안당 220원에서 350원으로 59% 뛰었다고 함.
- 이 단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전쟁이 나면 북한 돈은 종잇장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장 상인들이 쌀이나 상품을 팔지 않아 물가가 갑자기 뛰었다”면서 “모두 북한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중국 상인들과의 거래도 크게 줄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또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쌀값이 kg당 2천원을 넘고, 환율도 1위안당 500원까지 오를 것 같다”면서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임.

##### ● 北, 1~9월 對중국 철광석 수출액 118% ↑ (12/15, 미국의 소리(VOA))

- 올해 1~9월 북한의 대 중국 철광석 수출액이 1억3천300만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6천100만달러)보다 118% 증가한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같은 기간 철광석 수출량은 113만t에서 146만t으로 30% 늘어나는데 그침.



- VOA는 이날 중국의 해관통계 자료를 인용, “북한의 대 중국 철광석 수출이 올해 하반기 들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4월까지 월평균 11만t이던 것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20만t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힘.
- 이 방송은 “2008년 국제경제 침체로 하락했던 국제 철광석 가격이 올해 들어 급등해 북한의 철광석 수출액이 수출량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면서 “중국에 수출된 북한 철광석의 단가는 3월에 t당 64달러에서 4월 78달러, 6월 100달러, 7월 11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9월에 100달러선으로 반락했다”고 설명

■ 기타 (대내 경제)

- 금속공업성적인 공업총생산액이 11월말 현재 작년 대비 1.3배 증가 등 올해 금속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 중요지표 상세 보도(12/14, 중통)
  - 선철 2.4배, 강철 1.3배, 압연강재 1.6배, 철광석 1.6배 생산 장성
- [社說] 尙黨·민은 올해 이룩된 대고조 성과(△주체철·주체비료·주체섬유 생산 △경공업과 농업부문 발전 등)를 더욱 확대해 “조국역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며 ‘年末 강성대국건설 투쟁’ 독려(12/14, 중통·노동신문)
- 北 노동계급의 “올해 인민경제 주체화 실현을 위한 사업성과” 소개(12.14, 중통)
  - 2.8비날론연합기업소 개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가스화공정 완공, 대계도간석지 건설, 평양곡산공장·평양밀가루공장 등의 식료일용품 생산 등 자랑

다. 군사

● 北, 량강도 위수지역 10군단 창설(12/15,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국경지역인 량강도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10군단’을 창설했다고 데일리NK가 이날 전함.
-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9월 국방위원장(김정일) 명의로 량강도 10군단 창설이 최종 비준(승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량강도 혜산시 춘동에 군단사령부가 설치됐다”고 밝힘.
- 지금까지 량강도 지역은 북한의 민간무력의 하나인 교도대 10지구사령부가 지역 방어를 담당해 왔는데, 이번에 창설된 10군단은 삼수군의 제42여단(제1551군부대)과 갑산군의 제43저격여단(제682군부대)을 주력으로 풍산군과 운흥군의 교도여단들이 망라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
- 소식통은 ‘10군단’ 창설 배경과 관련해 “삼지연 비행장 및 미사일 부대, 백암군 레이더 기지, 후창군 미사일부대 등 주요 전략시설이 가



특해 요충지 방어의 강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함.

- 이번 ‘10군단’ 창설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맡는 1군단(강원 회양), 2군단(황북 평산), 4군단(황남 해주), 5군단(강원 평강) 등 4개의 군단에다 후방을 담당하는 3군단(남포), 7군단(함남 함흥), 8군단(평북 영주), 9군단(함북 청진) 등을 합쳐 모두 9개 군단을 갖추게 됐으며 6군단은 1996년 ‘군사쿠데타 모의사건’으로 부대 자체가 해산됐다고 매체는 덧붙임.

#### 라. 사회·문화

##### ● 네팔서 탈출한 北인사는 현지식당 책임자(12/14, 연합뉴스)

- 최근 네팔에서 실종돼 인도 뉴델리로 망명한 것으로 보도된 북한 인사 양모씨는 네팔 현지의 북한식당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소식통은 “네팔에서 실종된 북한 사람은 북한 식당과 관련돼 있고 양씨는 식당운영에서 책임자급 인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네팔에는 현재 북한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2개가 있고 양씨는 평양 옥류관의 네팔 분점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짐.
- 일각에선 양씨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해왔고 다량의 달러를 갖고 망명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소식통은 “체포된 한국인 2명은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으로 실종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영사면담을 통해 네팔 당국에 이들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상황에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말함.

##### ● 前 북한군 통역 한국행(12/14, 교도통신)

- 러시아 극동 연해지방에 밀입국한 탈북 남성(41)의 망명 요청을 러시아 정부가 거부했고, 한국이 조만간 이 남성을 받아들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짐.
-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러시아 연해 지방인 우수리스크 근교에 밀입국해 망명을 주장했지만 체포돼 11월 불법 입국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음.
- 이 남성은 재판 당시 자신이 북한 산업과 관계된 관청에서 근무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이는 표면상의 직함이고, 실제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러시아어 통역으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꿈. 러시아 치안당국자는 남성의 증언 내용에 진실성이 있다며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근무한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함.
- 이 남성은 올 3월 복역을 끝낸 뒤 러시아연방 이민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9월 거부 결정을 남성에게 통고 한 바 있음.



-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체결국인 러시아는 남성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북측의 요구도 거부했고, UNHCR의 주선으로 한국행이 결정됨.
- 이 남성은 지난 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이동했고, 조만간 한국으로 향할 예정임. 지난 6일 교도통신 기자에게 이 남성은 “김정일 체제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체제다. 처형이나 수용소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반 시민은 충분한 음식물도 없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외부에서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망명 동기를 설명
-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한 부친을 따라 13~17세 때 구소련에서 살았다는 이 남성은 “대부분의 북조선(북한) 주민은 자기 나라가 외국과 달리 이상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말함.
- 이 남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평양에 인민군 간부를 모아놓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는 김정은이라고 발표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김정일은 수년 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험이 없고 젊은 김정은으로는 나라를 통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언젠가 자유의 나라가 된 후에 평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함.

#### ● 北국경지역 ‘3호 담당제’로 개편(12/14, 데일리NK)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국경지역에 대한 주민 감시체계 강화 방안으로 기존의 ‘5호(五戶) 담당제’를 ‘3호 담당제’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고 매체가 보도
- 이 매체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온성군 인민반 회의에서 인민반장이 ‘최근 국경지역에 간첩, 불순분자들의 책동이 심하므로 3세대씩조를 나눠 서로 감시, 신고하는 체계를 철저히 세우라’는 김정은 동지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인민반장이 회의에서 나라를 배반하고 비법(불법)적으로 월경하는 것은 가장 엄중한 역적죄다”라면서 “서로 다른 세대에 없어진 사람이 있거나 낯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고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전달했다고 말함.
- 이 매체는 또 량강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18일 김정은 지시가 내려와 국경연선(접경)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간부들로 이뤄진 검열대가 국경지역에 파견돼 해당 지역의 보위부, 보안부원과 함께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비법 월경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 조총련계 학교 13곳 건물·토지 가압류 상태(12/15, 산케이신문)

-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금융기관의 파산 여파로 조총련계 조선학교 건물·토지 중 상당수가 가압류됐다고 신문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리회수기구(RCC)는 아이치(愛知), 기타큐슈(北九州), 도호쿠(東北), 지바(千葉)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함.
- 이는 조총련에 627억엔(약 8천600억원)을 빌려준 뒤 파산한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과 관련이 있다고 함. 조은신용조합의 채권을 인계받은 정리회수기구는 2002년부터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 등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 조선학교 부동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왔음.
  -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 6월29일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냄.
  -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에 직접 속한 건물·토지 뿐만 아니라 조선학교 소유의 부동산까지 가압류한 것은 조총련이 자금을 빌릴 때 조선학교가 명의를 빌려주는 등 사실상 일체가 돼 자산을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함.
  - 정리회수기구는 일본 예금보험기구가 100% 출자한 국책 회사임. 조은신용조합은 조선적(朝鮮籍.무국적) 재일동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돼 한때 일본 전역에 38곳으로 늘어났지만, 1997년부터 16곳이 잇따라 파산함.

#### ● 北당대표자회 선물에 중고TV 섞여(12/15, NK지식인연대)

- 북한 당국이 9.28당대표자회 때 지방 대표들에게 나눠준 기념선물 가운데 일부 중국산 중고TV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NK 지식인연대가 보도
- 이 단체는 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의 말을 인용, “행사가 끝난 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물’이라고 쓰인 25인치 컬러TV를 1대씩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일부는 중국산 중고제품이었다”고 밝힘.
- 양강도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선물로 받은 TV를 보다가 고장이 생겨 수리공을 불러 뜯어보니 한눈에 중고품임을 알 수 있었다. 수리공도 껍데기만 새것이고 안은 중고라고 말했다”고 이 단체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 이 일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당대표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선물로 받은 TV를 뜯어보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일부 중고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이 단체는 덧붙임.
- 한 소식통은 “선물을 마련할 외화가 없어 선물용 TV 중 일부는 중국에서 중고품을 들여온 뒤 껍데기만 새것으로 바꾼 듯하다”면서 “(북한 당국은) 당대표자회 참가자들에게 컬러TV 외에 양복, 수첩, 만년필, 참가증서 등을 나눠줬다”고 말함.
- 뒤늦게 중고TV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참가자들은 “(당대표자회 직전) 평양에 머물 때도 숙소를 고급호텔과 일반여관으로 나눠 차별 대우하더니 선물까지 중고품을 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관련 사이트 약 30개, 웹서버 8개국 분산(12/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과 외국의 기업 및 단체가 북한 체제선전,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전 세계에 약 30개에 달한다고 RFA가 이날 전함.
  - RFA에 따르면 이들 웹사이트는 북한 외에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이탈리아, 터키 7개국의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음.
  - 이 중 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6개는 주로 북한의 지적재산권에 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북한산 의약품, 미술품 등을 파는 것들임.
  - 북한에 웹서버가 있는 경우는 북한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공식 포털사이트로 알려진 '내나라' 2개뿐인데 주로 체제선전 뉴스를 다룸.
  -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와 '류경'을 포함해 '북한전시관' 등 모두 5개 사이트는 중국 내 서버를 씀.

####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과학원 도시경영과학연구소, 무동력식 분산 오수처리방법 개발(12/13, 중방)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1호발전소 조기 조업(12/13, 중방)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행복의 수레바퀴' 제작(12/13, 중통)
- 올해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고 선전(12/13, 중통)
- 北 국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등, 12.14 軍 제34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의 공연 관람(12/14, 중통)
- 北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제5권(경제)' 새로 출판(12/14, 중통)
  - 과학기술출판사, 도서 '조선동물지' 조류편 1을 새로 출판(12/15, 중통)
- 北, 평양에 국립연극극장 새로 건설 소개(12/15, 중통)
- 咸南 함흥시 성천강하류에서 1만여 년 전 '고래골격화석' 최초 발견(12/14,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北박의춘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12/13, 연합뉴스)
  - 박의춘 외무상이 3박 4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위해 12일 모스크바에 도착함.
  - 베이징-모스크바 노선을 운항하는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항공 Su-572편을 이용, 모스크바에 도착한 박 외무상 일행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곧바로 공항 내 정부 대표단용 귀빈실로 진입함.

- 모스크바의 추운 날씨에 대비한 듯 모피 털모자를 쓰고 두터운 외투를 입은 박 외무상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영재 대사 등 주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이어 귀빈실내 별도 대기실로 향함.
- 박 외무상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가 ‘한국 기자다. 방러 목적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 질문을 던졌으나 얼굴만 돌려 한번 기자를 쳐다봤을 뿐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음.
- 그는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회견을 하셨는데 왜 한국 언론에는 한마디도 없으시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대기실로 들어감.
- 대기실에서 짐을 기다리며 약 40분을 머물던 박 외무상 일행은 4시 50분께 준비된 자동차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서둘러 공항을 떠남.
- 한편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오랫동안 주러 대사를 지낸 박 외무상이 방러 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것이라고 하며 박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은 13일 개최될 것으로 보도

#### ● 러, 北과 외무장관 회담서 연평도포격 규탄(12/14, AFP통신; 로이터통신)

-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규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음. 동시에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일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이 끝난 뒤 내놓은 언론발표문에서 “러시아는 일련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동시에 “인명 피해를 초래한 남한 영토에 대한 포격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힘.
- 한편으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일에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함께 비판한 것임.
- 러시아 외부부는 그러나 군사훈련과 포격 사건의 주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임.
- 발표문은 “(러시아는) 한반도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제와 인내력을 발휘하고 상황의 추가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행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며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의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
- 또 “한반도 핵 문제 조정을 위한 협상 재개 가능성에 상당한 주의가 기울여졌다”며 “러시아는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



동 성명에 따른 의무사항의 무조건적 준수에 바탕한 6자회담 재개 조건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밝힘.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한 북한이 영변에 우리놈의 산업적 농축을 위한 시설을 구축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성명은 전함.
- 이번 성명은 러·북 양자관계와 관련, 양측이 정치·경제·인문 분야 등의 양자 관계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특히 국경 문제와 형사사건 관련 상호협력에 관한 조약과 항공 수색 및 구조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준비 등을 포함한 양자 간 조약·법률적 기반 강화 작업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고 밝힘.

#### ● 北통신, 러시아의 ‘연평도포격 비난’ 숨겨(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러시아 측이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을 강도 높게 비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3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한 것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회담에서는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진행됐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러시아측은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한 우리(북)측의 입장에 충분한 이해를 표시하면서 남조선의 도발로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과 남조선이 대규모 군사연습들을 연이어 벌여 놓아 조선반도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말해 러시아 측이 이 회담에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한 영토에 대한 포격’을 비난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끝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러시아는 일련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 인명 피해를 초래한 남한 영토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 “북의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농축우라늄 생산과 관련해 러시아측은 평화적 핵활동이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북측의 입장에 유의하였다”고 말함.
- 이와 함께 “쌍방은 9.19 공동성명의 자주권 존중정신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쌍무 및 다자회담들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회담에서 쌍방은 올해에 두 나라가 조·로(북·러)공동선언 발표와 조로국가간 조약체결 10돌을 공동으로 뜻깊게 기념한데 대해 평가했으며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



킬 데 대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 통신은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친선협조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러 외무부간 2011~2012년 교류계획서를 조인했다고 간략하게 전함.

● 리처드슨 평양行…16~20일 방북(12/15, 연합뉴스)

- 북한으로부터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14일(현지시각) 평양으로 출발했음.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공항 출발 전 “내 목표는 북한을 진정시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밝힘.
-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특사 자격으로 방북,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을 이끌어내기도 했음.

● 北, 日총리 ‘한반도 자위대파견 논의’ 발언 비난(12/15, 조선중앙통신)

-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거칠게 비난함.
- 통신은 이날 ‘무엇을 노린 자위대 파견 망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는 연평도의 군사적 충돌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발발 직전에 이른 때 조선(북한) 침략전쟁 수행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이 통신은 이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 재침 야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망상으로, 전체 조선민족의 각성된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과거 조선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사죄하고 배상하는 대신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데 대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힘.

● 北외무상, “러시아 방문결과에 만족”(12/17, 이타르타스통신)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가진 러시아 방문 결과에 만족한다고 16일 밝힘.
- 이날 귀국길에 오른 박 외무상은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이번 방문을 잘 보냈으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함.
- 앞서 이날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측이 모스크바에서 “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양자간,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北외무성 “한반도 극단사태 美책임..결과 계산(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악화되는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면서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결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주되는 책임은 남조선 괴뢰들을 도발로 사촉한 미국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
  - 대변인은 “지금 주변나라를 비롯한 전반적 국제사회가 연평도 포사격의 무조건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은 그를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면서 “‘인간방패’까지 미국이 직접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함.
  -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들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밝힘.

#### ■ 기타 (대외 일반)

- ‘위킴릭스’(인터넷 웹사이트)의 美 외교문서 공개 파장과 관련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국제사회성원들에 대한 양면주의적 정체가 더욱 드러났다”고 外信 傳言(12/13, 중방)
- 美國의 현대과학기술 이용 심리모략전에 대처한 “反帝自主 나라들의 사상교양사업 강화 필요성” 언급 및 자주권 수호를 위한 反美투쟁 선동(12/14, 중통·노동신문)
- 日·美 합동군사연습 진행(12/3-10)은 “재침야망에 환장한 군국주의 세력의 침략적 정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재침야망 실현 책동’ 비난, 경고(12/15, 중통·노동신문)
- 김영남, 12/15 駐北 네덜란드 대사 ‘폴 알렉스 멘크벨트’ 신임장 접수(12/15, 중통)
- 김영남, 12/16 駐北 모리타니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접수(12/16, 중통)
- 박의춘 외무상 일행, 러시아방문 후 귀환(12/16, 평방)

#### 나. 6자회담(북핵)

- 北외무성, “6자회담 등 모든 대화제안 지지”(1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이 대변인 담화는 “각종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미국은 모든 대화제안을 회피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에 전쟁 분



위기를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면에는) 우리의 경제 건설을 방해하고 이 지역에서 이웃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를 추구하려는 전략적 기도가 깔려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답화는 또 “우리의 자립적인 경수로 건설과 연료보장을 위한 농축우라늄 생산은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이며, 미국이 이를 걸고 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핵에너르기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안팎의 나라들이 다같이 실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며, 9.19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답화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려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지금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확대하는 데서 필요한 것도 전쟁분위기가 아니라 안정된 평화적 분위기”라고 지적함.

● 유엔 대북제재위, 北 우라늄농축시설 조사 착수(12/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관리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지난 달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공식 조사를 결정했다고 위원회 소속 한 외교관이 17일(현지시각) 밝힘.
-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해당 시설을 직접 참관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브리핑 및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국무장관의 중동순방時 對北발언(北의 핵계획에 의해 군비경쟁 촉발)을 “핵전쟁 위험조성행위”라고 비난 및 “北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정당성” 주장(12/14, 중통·노동신문)

3. 대남정세

● 北조평통, 李대통령 ‘통일’ 발언 비난(12/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북에 대한 용납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데 대해 “동족대결 본심을 드러낸 반민족적 망발”이라며 “우리 인민은 신성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냐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면서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 사이트는,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을 참관한 뒤 국민의 흔들림 없는 안보의식을 당부한 것을 거론, “남조선 인민들 속에 극도의 동족 적대의식과 북침전쟁열을 고취해 기어 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호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위협함.
- 이 사이트는 또 “총리로서,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의 만행(연평도 포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군사지역에 민간인들을 집중 배치해 놓고, 우리 영해에 대한 포격 시 민간인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것으로, 만행의 장본인은 바로 괴뢰들 자신”이라고 역시 주장을 펴.

#### ● 北신문,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12/17, 노동신문)

- 신문은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
- 신문은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 조선반도가 세계적으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대북) 침략정책 강행에서 기인한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미국이 안고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논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미국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힘.

#### ● 北,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 시 2차, 3차 타격”(12/17,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남측군이 계획대로 연평도 일원에서 사격훈련을 강행하면 ‘예상(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고 북한군이 위협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은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공화국(북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이 이날 오후 12시 20분 남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이 통지문은 또 “그 화력의 강도와 포괄 범위가 지난 11월 23일(연평도 포격 당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함.
- 남측군은 16일 ‘연평도 일원에서 18~21일 중 하루를 골라 해상사격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훈련 수역은 가로 40km, 세로 20km의



- 연평도 서남방 우리 측 해역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은 지난달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퍼붓기 앞서 당일 오전 8시 20분께 “남측이 북측 영해로 포사격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으나 남측군은 그런 사실을 연평도 공격이 자행된 이후에 공개됨.
  - 남측군은 이날인 17일에도 북측이 이런 통지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중앙통신 보도가 나올 때까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음.
  - 통신은 이날 인민군 북측단장 통지문과 관련, “괴뢰 군부호전광들이 설정한 연평도 포사격 구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라면서 “남선의 미제 침략군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비호, 두둔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
  - 이어 “전면파산에 직면한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북방한계선’을 “견지해보려는 것이 역적패당의 기도”라면서 “군사정전위원회 소속의 어중이 떠중이들도 ‘참관’의 명분으로 포사격훈련에 대한 통신, 의료 등 군사적 지원에 참여하려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함.
  - 또 “신임 국방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 포사격 도발’(우리 군의 도발이란 주장)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자위권 발동’과 타격비행대를 포함한 ‘합동전력에 의한 단호한 응징’이니, ‘원천지 타격으로 이어지는 전면전 불사’니 하는 호전적 폭언을 연발하며 군사적 도발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지금 괴뢰 호전광들은 제2의 연평도사건을 도발해 보려고 이 일대에서 또다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그 하수인들의 전쟁책동과 침략적 결탁을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북한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20~24일 동·서·남해 23곳에서 실시될 예정인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도발하려는 선전포고”라고 거칠게 비난함.
- 北 “사격훈련, 실전으로 이어질 수도”·재차 위협(12/18, 우리민족끼리)
- 매체는 ‘북침을 겨냥한 사격훈련’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킨 장소에서 또다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무분별한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20~24일 동·서·남해 23곳에서 시행될 예정인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위협을 가함.
  - 이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지칭)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덮어씌워 지게 된다”고 덧붙임.



● 南전투기 폭격, 전면전 확대될 수도(12/18, 조선신보)

- 신보는 '2010년 격동된 정세, 대세의 흐름을 잡은 조선의 선제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남측이 준비하고 있었던 전투항공기에 의한 대북폭격이 도중에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국지전의 틀을 벗어나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었다"고 밝힘.
- 이어 "구성된 정세는 조선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내놓은 것은 정세를 내다본 탁월한 외교술의 산물"이라며 평화협정 제안의 정당성을 주장
- 또한 "미국의 전쟁소동을 근원적으로 제압하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도, 남조선군의 포격도발에 대한 물리적 타격도 모두 자기 힘을 믿는 나라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조선에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력갱생으로 최첨단을 점령한 국방력이 있다"고 말함.

● 北TV, '해안포' 사격 장면 나오는 영화 방영(12/19, 조선중앙TV)

- 북한군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맞서 '자위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조선중앙TV가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방영해 눈길을 끄.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인민군 4.25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수호자들'이라는 제목의 조선예술영화를 재방송함. 제작연도가 알려지지 않은 이 영화는 2005년 12월, 2006년 9월, 2008년 2월에도 각각 방영된 바 있음.
- 영화는 백령도가 보이는 북한 섬 웅화도(가상의 섬)를 20여 년간 지키는 현직 '방어대장'의 과거 회상이 주를 이루는데, 1974년 당시 북한이 해안포 갱도 진지를 이곳에 구축하자 갱도를 파괴하려고 백령도로부터 침투한 우리 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내용임.

■ 기타 (대남)

- '남측의 외세공조책동이 연평도포격도발을 구실로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反北공조 구걸·야합하여 전쟁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은 사대매국의 극치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12/13, 중통·노동신문·평방)
- 우리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유엔총회 제3위원회) 공동제안 및 지지환영 관련 "北체제를 헐뜯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持續 비난(12/14, 평방)
- 우리 정부와 與黨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및 청년실업대책안' 발표 예고 등 청년실업문제 해결책 방안강구 노력을 "허울 좋은 空約"이라고 시비, 선동(12/14, 평방)
- 통일부장관의 '한반도선진화재단 축사'(최악의 선택, 주도적 설계 등) 거론 "연평도 포격도발의 책임을 우리(北)에게 넘겨씌우고 체제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유엔 대북제재위, 北 우리늄농축시설 조사 착수(12/1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관리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지난 달 공개한 영변 우리늄 농축 시설에 대한 공식 조사를 결정했다고 위원회 소속 한 외교관이 17일(현지시각) 밝혔다.
- 임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해당 시설을 직접 참관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브리핑 및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음.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돕는 핵확산 전문가들의 패널이 헤커 소장의 브리핑 내용 등을 상세히 조사해 오는 1월 중순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임.
- 브리핑에서 헤커 소장은 영변 우리늄 농축 시설이 핵무기에 필요한 고농축우리늄(HEU) 생산 시설로 전환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매년 핵폭탄 1개 가량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우리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북한이 해당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제조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고강도 강철-알루미늄 합금, 밸브, 펌프 등 필요한 부품들 장기간 수입해온 것 같다고 헤커 소장은 관측했음. 이에 따라 미국 등이 안보리에서 이들 물품을 대북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 “北대응, 5자합의 안되면 한·미·일끼리 대처”(12/17)

-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미·일 3국끼리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로부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한 미·중간 고위급 협의 결과를 설명받은 것에 대해 “한·미·일 3국 간에는 의견의 일치가 있다. 3국은 같은 행동을 보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그는 중국이 미국과 협의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재차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중국이 미국과 협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그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 문제에 대해선 “중국은 기존의 입장과 유사한 것 같다”며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처럼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중국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늘 토론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우리쪽에서 관심사처럼 부각돼 있으나 미·중 고위급 회담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계기로 한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며 “미국 측에서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이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밝혔고 그것이 미국 정부와의 대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가 제시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5가지 이행사항이 한국과 협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선 “서로 얘기한 큰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볼때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 부분이 대화재개 조건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음. 아울러 그는 북한이 이날 국방부에 전통문을 보내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위협한 것에 대해선 “성김 특사와 그 얘기도 있었다. 미국은 우리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 “6자회담 재개 조건에 휴전협정 준수도 포함”(12/17)

- 한·미·일이 요구하는 6자회담 재개조건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약간 다르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서울발로 ‘익명의 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5개 항의 전제 조건에 합의했음. 이 전제 조건의 내용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약속 등이라고 보도했고, 이후 여기에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이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돌았음.
-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17일 5개 조건은 UEP 중단 외에 IAEA 감시 요원 복귀, 2005년의 6자회담 공동성명 준수, 한국전쟁 휴전협정 준수, 탄도미사일 발사 보류 등이라고 전했다. 이중 휴전협정 준수는 최근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짚어 넣은 것으로 풀이됨.
- 아사히신문은 또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지난 9일 방북했을 때 이같은 한·미·일의 요구를 북측에 전했다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적었음.
- UEP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고 일축했고, 거꾸로 “제재의 모자를 쓴 채로 대화에 응할 수는 없다”며 유엔의 제재가 해제돼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임. 또 중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참가국이 나오면 참가하겠다”



며 한·미·일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음.

### ● 다이빙궈 “6자회담이 유일.효과적 해법”(12/17)

-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6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급 대표단에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풀고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음.
- 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미 대표단을 만나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어렵게 얻은 협력의 결과물이며 유관 각 측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포격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은 한반도 이슈들과 관련해 책임감있는 태도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대치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각측이 협력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다이 국무위원은 아울러 “미중 양국은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빨리 남북한 간 대화를 포함한 협상 프로세스를 촉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국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미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미국은 중국과 함께 노력해 남북대화를 포함해 내적인 접촉 과정을 촉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이외에 미중 양국간 현안도 논의됐음.
- 미 대표단은 이날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베이징(北京)에서 방중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임. 미 대표단은 이번 방중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장즈쥘(張志軍) 상무부부장,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미주 담당 부부장,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면담했음.
-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현지시각으로 16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북한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제시했음.

### ● 헤커 “北 핵 시설 가동 능력 우려된다”(12/16)

- “북한이 핵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앞서 지난 달 9~13일 북한을 방문해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을 시찰하고 돌



아온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16일 보도된 러시아 관영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해 얻은 연료로 경수로를 가동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이것이 주장했음.

- 헤커 박사는 영변 핵시설을 둘러본 얘기를 상세히 전하며 이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그냥 우라늄만을 농축하는 시설은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며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경수로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려 할 때 복잡해진다”며 “북한인들이 상당히 새로운 이 기술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된다”고 말했음.
- 박사는 이어 “서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 시설을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얻어 건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원자로 자체는 스스로 건설하고 원심분리기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조력자 망(網)의 도움을 얻어 제작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빨리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앞서 다른 곳에서 같은 작업을 해오고 있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며 북한 내에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할 것이라는 최근 미 국무부와 일부 핵 전문가들의 주장을 반복했음.
- 박사는 “영변 시설이 그렇게 빨리 지어졌다는 것은 원심분리기를 올해 이곳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 나의 결론”이라며 “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유사한 시설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음.
- 헤커 박사는 이어 북한이 핵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한 사실을 보여주는 위키리크스 자료 공개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에서 내가 본 것은 북한이 이란보다 핵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의 핵폭탄 제조 능력에 대해 “북한인들은 핵 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다”며 “그러나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아직 고도의 소형 핵무기를 만들 능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북한이 자신을 초청한 이유에 대해 헤커 박사는 “무엇보다 나와 함께 간 다른 동료 2명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부터 거의 매년 북한을 방문했고 지난 11월 방문은 7번째였기 때문에 북한인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 같다”며 “물론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는데 우리를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빅터 차 “6자회담 아직 생명력 있어”(12/16)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6일 “북핵 6자회담이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차 교수는 이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6자회담



- 은 여전히 동북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유일한 다자간 기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6자회담의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체제를 활용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 차 교수는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며 “회의 호스트로서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 핵 프로그램 불능화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북한의 비핵화라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봉쇄와 억압에 방점을 찍는다면 다른 형태의 대북 접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6자회담의 유용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6자회담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도 “6자회담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자회담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6자회담은 단순한 협상을 넘어 6개 참가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2005년 9.19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플레이크 소장은 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감싸지 말라는 시그널을 중국에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두 가지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불안정한 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최근 공개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영변 외 다른 곳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보고서가 사실이고 농축시설이 최근에 지어진 것이라면 북한이 관련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가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부상,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 밖에 김홍규 성신여대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중국의 부상, 북한의 권력승계, 6자회담,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했음.

● 위성락 “러, 北농축.연평도 포격에 비판적”(12/16)

- 러시아가 북한의 우리농 농축 활동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고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5일 밝혔음.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 본부장은 이날 오후 러시아 외무부를 방문해 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회담한 뒤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단에 한 브리핑에서 “우리과 러시아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위 본부장은 “러시아는 북한의 우리농 농축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참가국 간 합의인)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고, 연평도 포격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성명에서 밝혔듯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러시아가 조금 더 강조한 것은 상황이 더 이상 긴장되지 않도록 하고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과 불법 행위에 비판적인 것은 한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러시아가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에 좀 더 적극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위 본부장은 그러나 이 같은 차이가 이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 위 본부장은 이어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엄한 메시지를 줘서 앞으로 이런 일(연평도 포격이나 핵농축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뒤 북한의 행동을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대화를 얘기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임을 러 측에 설명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시점이 아니며 북한에 엄정한 메시지를 줘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음.
- 그는 이어 현 위기 상황 해법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한·미·일·중·러) 5자 간에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확보해 북한의 도발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함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뒤 북한의 행동을 보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도 관찰해 미래의 적당한 시점에 대화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사회의 협조에 유엔 안보리 논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위 본부장은 “안보리 소집은 지금 한국이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며 “하지만 안보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논의가 생겨날 개연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위 본부장은 보로다브킨 차관과의 면담에서 앞서 13일 이루어진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 결과에 대한 얘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음.



- 한편 러시아 외부무는 이날 위 본부장과 보로다브킨 차관의 회담이 끝난 뒤 낸 짤막한 언론 발표문에서 “양측이 한반도의 현 상황과 남북한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시에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 ● <北 ‘협상의지’ 과시하면서 풍계리는 분주>(12/15)

-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음. 중국을 통해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약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과시하며 위협공세를 계속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우선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최근 방북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에게 중국이 제의한 6자협의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압력도 작용했겠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이전부터 스스로 요구해온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며 제재국면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그러나 과거 핵실험을 단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추정할 만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음.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풍계리에서는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갱도 굴착 등에서 나오는 토사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산케이신문은 영국 군사정보회사인 IHS제인스가 작년 5월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한 풍계리 주변 시설에서 터널 굴착 등의 활동을 보여 주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다고 지난달 17일 보도했음. 신문은 핵실험장의 남쪽 150m 지점에 새롭게 굴착한 토석류가 3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고, 핵 실험장 북쪽 180m 지점의 2개소에서 지면을 굴착한 흔적이 보였다고 전했다. 이르면 3월중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음.
-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영변 지역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도 국제사회에 대한 전형적인 시위임. 북한이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달 초 방북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통해 밝힌 영변 지역 ‘실험용 경수로’ 건설도 북한의 또 다른 핵 카드로 우려되고 있음. 북한은 프리처드 소장에게 2012년 완공을 목표로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지만 핵무기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은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해석되고 있음. 또 김정은으로 후계승계 과정에서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지난달 연평도 포격도발과 이후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언급하며 잇따라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같



은 맥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임.

### ● 美 “北, 우리늄농축 시설 추가 보유”(12/15)

- 미국은 14일 북한이 미 전문가들에게 공개한 영변의 우리늄농축 시설 외에 최소한 한 곳 이상에서 또 다른 우리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리늄농축 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의 공개를 통해 미 대표단이 본 것(우리늄농축 시설)이 난데 없이 나오지 않았다(did not come out of thin air)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한 다른 곳에서 (우리늄 농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반영한다”고 말했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당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북한의 3~4곳에 우리늄농축 시설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정보사항이라면서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오랫동안 확실히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 일부 한국 언론은 비밀 우리늄농축 시설 의심지로 금창리 동굴단지 와 평양시내 연구소, 양강도 영저리의 미사일 기지 등을 한·미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이 영변 우리늄농축 시설을 공개한 뒤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늄을 농축하는 비밀 시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음. 이와 관련,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는 이달 초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2009년 4월 훨씬 전부터 우리늄 농축 작업을 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가 농축시설 의혹을 제기했음.

### ● “北, 6자회담 전제조건 사실상 거부”<교도>(12/1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주 방북한 중국의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에게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상을 전제 조건 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베이징의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이는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음.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이 국무위원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긴급협상에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 개최가 한층 어렵게 된 셈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 또 김 위원장은 다이 국무위원에게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한국의 민간인 2명이 숨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포격 자체는 한국



의 군사 훈련에 대한 ‘자위적인 대항조치였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중 양측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유관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유관 각 측과 노력해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 “6자회담 재개 조건, 5자간 합의 있어야”(12/14)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복안을 갖고 있으나 5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나머지 4개국과 재개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일 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평도 사건 이후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한 관련국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김 장관이 거론한 ‘우리 정부의 복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미국, 일본과는 이미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여 주목됨.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재개조건을 설명하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그러나 연평도 사건과 6자회담 재개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도 그랬지만 이것이 6자회담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이 대화를 하고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이어 연평도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여부에 대해 “현재 안보리 이사국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부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김 장관은 또 러시아 정부가 북·러 외무장관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러시아가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속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자주 면담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김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다 분명하고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내 우리농 농축시설이 영변 이외에 3~4곳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첩보 수준의 보도로 정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北, 6자회담 재개 위해 비핵화 행동 보여야”(12/14)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관련국들과 함께 대처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 김 장관은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군사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고자 하며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위성락, 오늘 방러..‘연평도.UEP사태’ 논의(12/14)

-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4일 오전 러시아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및 우리농농축 프로그램(UEP)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 위 본부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러시아에 도착한 뒤 15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차관 등 러시아 북핵담당 당국자들을 면담하고 16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 위 본부장은 출국 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에 대해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 등에서 러시아와 협조를 해나가자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보로다브킨 차관과 면담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 등에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난 7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위 본부장은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앞서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정세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과 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러시아 외교부는 회담이 끝난 뒤 언론발표문에서 “러시아는 일련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며 “인명 피해를 초래한 남한 영토에 대한 포격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위 본부장은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오는 17일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방한하는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와도 면담할 계획임.

### ● 힐 “北, 우라늄농축 공개로 6자회담 거짓말 입증”(12/14)

-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는 14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 “북한이 과거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에 거짓말을 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했다.
- 힐 전 수석대표는 이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은 사실상 핵신고한 것과 같다”면서 “이는 과거 6자회담 당사국들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거쳐 자국의 핵시설을 처음 신고한 것이 2008년 6월인데, 이 당시 의장국 중국에 제출한 60쪽 분량의 신고서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았음.
- 힐 전 수석대표는 이어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다 이번에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북한의 좋지 않은 특성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미신고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그는 또 “당시 북한의 우라늄 농축능력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다소 불완전했다”면서 “그래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미국과 한국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매우 강력한 결의를 보여줬다”면서 “중국은 이웃나라인 북한에 대한 역할을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 미·북 관계

#### ● 리처드슨, 南北美 참여 감시기구 제안(12/19)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19일 북한 측에 남북간 군사 핫라인 가동과 남북 및 미국이 참여하는 분쟁지역 감시를 위한 군사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음.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방북 중인 리처드슨 주지사가 이날 오전 박림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핫라인 가동과 함께 대치 상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과 남북한이 서해 같은 분쟁지역을 공동으로 감



- 시하는 군사위원회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 CNN은 리처드슨 지사가 “박 국장이 군사적 충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 핫라인 제안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방송은 박 국장이 남·북·미가 참여하는 군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NYT는 박림수 국장은 두 제안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보도해 CNN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음.
  - 리처드슨 지사는 그럼에도 “이는 약간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미 행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방북은 미국정부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한국이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할 경우 북한의 대응 방식에 관해 “박 국장은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면서도 “그는 적대적이지도 않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그는 동행 취재를 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격훈련과 관련, “북한 인사들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들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현 상황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지사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포격 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고 예정된 사격훈련에 매우 마음이 상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측은 리처드슨 지사에게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의 공동 발굴 재개도 제안했음. CNN은 박 국장이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일부가 발굴됐다”고 말하면서 유해 사진 일부와 한 미군 병사의 군번줄 인식표를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리처드슨 지사 역시 이는 “긍정적인 제스처였다”고 평가했음.
  - AFP통신에 따르면 리처드슨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무성과 군부 지도자 3명과의 회담에서 북한 측에 한국군의 예정된 군사훈련과 관련, 최대한의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저녁 북한 관리들과 만찬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해 19일 오전(현지시간) 열리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당사국에 자제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음. 그는 “지금은 한반도 위기상황인 만큼 안보리 회의가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리처드슨 지사는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은 북핵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의지 표명을 넘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포격과 같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앞서 “지금 상황은 불씨와 같다”며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사태



를 진정시킬 뿐 아니라 북한 측이 할 수 있는 조치, 특히 아마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 허용 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16일 베이징을 통해 평양을 방문한 리처드슨 지사는 19일까지 자신을 초청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리용호 외무성 부상, 박림수 국장 등 외무성과 군부의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이번 방북은 개인자격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계관 부상이 직접 초청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 北외무성 “한반도 극단사태 美책임..결과 계산”(12/18)

- 북한 외무성은 18일 악화되는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기면서 “조선반도에 초래되는 모든 극단사태와 그 후과(결과)에 대해 미국과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에 있게 될 2차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주되는 책임은 남조선 괴뢰들을 도발로 사촉한 미국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대변인은 “지금 주변나라를 비롯한 전반적 국제사회가 연평도 포사격의 무조건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은 그를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면서 “‘인간방패’까지 미국이 직접 마련해 주고 있다”고 말했음.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과거에도 실시한 적이 있고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은 이 군사훈련을 추가도발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외무성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들이 포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밝혔음. 그는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 리처드슨 “北에 자제 요구, 약간 진전있는 듯”(12/18)

- 북한을 방문 중인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 측에 극도의 자제를 요구했으며 약간의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음. 동행 취재 중인 CNN에 따르면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만찬 등을 통해 북한 외무성 관리들에게 “상황을 냉각시키자. 대응하지 말라. 한국이 사격훈련을 예정대로 하게 놔둬라”라며 극도로 자제할 것을 매우 강도 높게 요구했음.



- 리처드슨 주지사는 “내 생각에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며 “북한 측에게서 받은 느낌으로는 그들도 상황을 추스르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만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남북간 긴장 고조에 대한 북측의 우려를 표시했으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리처드슨 주지사는 설명했다.
- 그러나 이 같은 관측은 아직 예비적인 것으로 “오관 가능성도 엄청나다”며 18일 예정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및 북한 군 지도자와의 면담을 가진 뒤에 북한 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판단하겠다고 리처드슨 주지사는 덧붙였음. 리처드슨 주지사는 또 북한 측에 현 상황을 진정시킬 방법으로 남북간 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지금 상황은 불씨와 같다.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라며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사태를 진정시킬 뿐 아니라 북한 측이 할 수 있는 조치, 특히 아마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허용 등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합참부의장이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연쇄 반응(chain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리처드슨 주지사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 ● 매케인 “대북 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추진”(12/17)

- 2008년 미국 대선 때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부시 행정부 때 중단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금융제재를 즉각 회복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7일 전했다.
- 매케인 의원은 이 방송과 ‘특별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무기거래, 마약밀매, 위조화폐와 관련된 마카오 은행의 동결자금도 풀어줬지만 결국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7명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음.
-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했고, 한국도 4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단을 조성했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자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군사장비를, (미국이)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있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종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도, 미국



이 주둔하는 통일된 한국도, 탈북 난민의 유입도 바라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권력 이양은 김정일의 건강악화 때문이고, 이런 북한의 내부상황이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 北신문, 미국에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요구(12/17)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음.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 조선반도가 세계적으로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대북) 침략정책 강행에서 기인한다”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미국이 안고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또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논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미국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 ● 美 리처드슨 “北수뇌부 메시지 기대”(12/16)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16일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으로 향했음. 리처드슨 주지사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직접 초청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 리처드슨 주지사는 방북에 앞서 “방북 기간에 북한의 통치자들(rulers)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그는 “내 희망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줄 내 메시지는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고 (북한이) 남한을 존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로 이해될 수 있으면서 그 목표가 (북한의 도발 등의) 강한 행동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그런 대화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그들이 나를 부를 때는 항상 뭔가 친절한 메시지를 전하러 할 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북 기간에 누구를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어 “북한 측에 영변 핵 시설 방문을 요청해놓았다”고 공개했음. 그의 이런 제스처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전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 등을 초청해 보여준 영변의 우라



높 농축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계관 제1부상을 내세워 리처드슨 주지사를 초청한 것은 이를 매개로 북핵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미 회담 개최를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하고 있음. 미 국무부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미 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가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그러나 리처드슨 주지사가 북한에서의 논의 내용을 미 행정부에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과 관련, “북미간 접촉을 지지한다”고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나 중국이 그와 관련해 회견할 계획은 없으며 서로 대화를 통해 관심사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음.

#### 다. 중·북 관계

##### ● “北-中, 신의주.황금평개발 내년 본격화”(12/16)

- 북한과 중국 단둥(丹東)시가 압록강의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을 내년에 본격화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단둥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단둥시가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을 내년 5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하고 중국 내 투자가 모집에 나섰다.
- 단둥시는 이미 지난달 말 20여 명의 외지 중국 기업인을 초청, 현장을 답사토록 하고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등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음. 단둥시는 북한으로부터 수익 위안의 임대료를 주고 황금평과 위화도의 50년 임대권을 이미 확보했으며 임대 기간을 10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북한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단둥시는 이들 2개의 섬을 보세구와 음식품류 가공기지, 면세가공품기지, 물류기지,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위화도와 황금평이 개발되면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1천여 농가를 이주시키고 대신 노동자들을 투입, 중국 기업들이 설립한 공장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외화벌이를 시키겠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은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력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도 가능하고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북한의 자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높여 필요할 경우 대북 통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음.
- 그러나 북한과 단둥시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이 조기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음. 단둥의 한 소식통은 “1992년에도 황금평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한다고 축포를 쏘면서 거창한 착공식을 했지만 20년 가까이 되도록 진척된 게 하나도 없다”며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당시



북한 고위층과 합의한 신압록강대교조차 건설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쉽게 추진되겠느냐”고 반문했음.

- 그는 “연평도 사태 이후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누가 감히 대북 투자에 달려들겠느냐”고 덧붙였음. 또 다른 소식통도 “북한과 단동시가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임대기간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돈이 들고 대북 투자에 나섰다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낭패를 본 중국 기업이 적지 않아 북한 당국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어서 중국의 민간 투자자들은 선불리 위화도와 황금평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 ● “김정일, 中 핵사찰 요구에 ‘알겠다’고 밝혀”(12/15)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알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 정부의 핵심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북결과를 우리 정부에 설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IAEA 사찰단의 복귀 문제에 대해 ‘무슨 얘기인 지 알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왔다”며 “이는 긍정적인 입장도, 부정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IAEA 사찰관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음.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중국 측은 김 위원장이 IAEA 사찰단의 복귀문제에 대해 ‘알겠다’면서 마치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지만 이를 사찰단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음.
- 이 당국자는 이어 “김 위원장 발언의 정확한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북한은 2009년 4월14일 6자회담 중단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을 추방시켰음.

### ● 中 “北, 6자 긴급협의 개최에 동의” 확인(12/14)

- 중국 정부가 14일 “북한이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했음.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8~9일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의 방북과 관련한 북중 협의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북중 양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책임있는 태도로 긴장을 높이지 말고 평화를 위한 건설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소개했음.
- 이어 “북중 양측은 6자회담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정을 이뤄야 하며 유관 각측과 노력해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



- 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 대변인은 이어 지난 주말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베이징(北京) 방문을 계기로 중일 회담이 개최돼 한반도 정세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됐다고 소개했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중국측이 일본측에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적극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 장 대변인은 이어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시 중국을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경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관심을 표시한다”면서 “(그런) 북미간 접촉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장 대변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관련,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당 결의를 책임있는 태도로 이행해야 하며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은 나아가 연평도 포격사건 등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각측이 서로 마주 보며 안정을 지향하고 충돌을 피하는 게 남북한의 이익이면서 (동북아) 지역의 공통된 이익”이라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라. 일·북 관계

##### ● 北, 日총리 ‘한반도 자위대파견 논의’ 발언 비난(12/15)

-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거칠게 비난했음. 북한의 중앙통신은 15일 ‘무엇을 노린 자위대 파견 망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는 연평도의 군사적 충돌로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발발 직전에 이른 때 조선(북한) 침략전쟁 수행을 합법화하려고 책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 이 통신은 이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조선 재침 야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망상으로, 전체 조선민족의 각성된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과거 조선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사죄하고 배상하는 대신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데 대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마. 기 타

##### ● 안보리, 한반도 긴급회의 내일 소집(12/1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함. 이번 회의 소집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식 요구했음. 유엔의 한 관계자는 18일 “최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 계획에 대해 북한이 ‘2차 3차의 자위적 타격’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들이 안보리에서 논의



-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당초 러시아는 18일 오후(현지시각)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일부 안보리 회원국들이 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춰졌음. 한 외교관은 긴급회의가 일요일(19일) 오전 11시에 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안보리 회원국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등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회의에서 긴장 고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쪽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자제를 촉구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안보리 비회원국인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긴밀한 공조를 펴고 있는 반면, 북한 역시 중국, 러시아 등과 사전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우리놈 농축 등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며, 중국은 북한 감싸기 차원에서 한국군의 사격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한국군의 사격 훈련을 싸잡아 비판해 온 러시아의 입장이 회의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변수라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망했음.
  -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우리놈 농축과 연평도 공격 등과 관련한 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물밑에서 조율해 왔지만 미·영·불과 중국 간 견해차가 심각해 성사되지 못해왔음.
  - 유엔 관계자는 “회의 소집은 이사국이 요청하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를 놓고 안보리 내의 이견이 심각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19일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한국군은 당초 이번 주말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상 상태를 고려해 이를 내주 초로 연기한 상태임. 앞서 러시아 정부는 17일 한국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 계획 취소와 북한의 군사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공식성명과 언론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고, 중국 정부도 한국 대사를 불러 훈련 계획 취소를 요구했음.
  - 하지만 한국군은 북한의 협박과 중국·러시아의 자제 요청은 연평도 사격훈련의 시행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한반도 긴장 고조, 러시아 안보에 직접 영향”(12/19)

-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인 비탈리 추르킨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남북간 대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



를 표시했음.

- 추르킨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긴장 고조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은 러시아 연방의 국가적 안보 이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추르킨 대사는 이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구했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19일 오전 11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그는 안보리 논의와 관련, “남북 양측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 러, 한국 연평도 사격훈련 취소 강력 촉구(12/18)

- 러시아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 훈련 계획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며 훈련 계획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군이 18~21일 중 하루를 골라 연평도 인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연평도 인근 서해 상에서 전투용 포탄을 이용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극단적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음.
- 성명은 이어 “11월 23일 이 논쟁적 해역에서 실시된 유사한 군사훈련은 남북한 간 포사격 교환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연평도 주민들을 포함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다”고 상기시켰음.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에서 추가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된 포 사격 훈련 실시를 자제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며, 최대한의 자제와 인내를 발휘하고 상황의 추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행보를 허용하지 않을 필요성에 대해 모든 관계당사국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성명은 “러시아 외무부는 현재의 단순치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에서의 긴장해소와 대화 재개, 양측간의 모든 논쟁적 문제의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 등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날 러시아 주재 이윤호 한국 대사와 존 베일리(John Beyrle)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한국의 연평도 훈련 계획에 대한 극단적 우려를 표명했다고 러 외무부 공보실 관계자가 밝혔음. 러시아가 외국의 군사 훈련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취소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

### ● 北 외무상 “러시아 방문결과에 만족”(12/17)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가진 러시아 방문 결과에 만족한다고 16일 밝혔음. 이날 귀국길에 오른 박 외무상은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이번 방문을 잘 보냈으며 다양한 사안에 대



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 앞서 이날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측이 모스크바에서 “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양자간,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측이 지난 13일 박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인명 피해를 초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美, 北겨냥 제재이행.한미일 3각협력 강화>(12/16)

- 미국 국무부는 15일 공개한 ‘4개년 외교.개발 검토(QDDR)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이행 방안을 자세히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북한 등을 겨냥해 나온 제재이행과 불법금융망 차단 능력 강화, 한·미·일 협력 체제를 포함한 아시아 내의 3각 동맹체제 강화 방침이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우선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불량정권이나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불법금융망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무부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불량정권들은 불법 금융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적대세력들에 대한 제재 및 경제적 압박과 관련된 정책의 범부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조율하는 고위급 관리를 국무부 내에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내년 6월까지 국무부의 제재 및 불법금융망 차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고서는 또 전략적 핵무기 감축이나 북한, 이란에 의한 위협 등을 미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로 거론하면서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역할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양자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서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 특히 보고서는 “한국-미국-일본 3자간, 미국-일본-호주 3자간을 포함한 좀 더 조직적인 3자 협력체제를 아시아 동맹국들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대응함은 물론 소위 G2(주요 2개국) 국가로 떠오른 중국의 팽창을 겨냥, 아시아에서 다양한 미국의 3각동맹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임. 보고서는 이런 3각협력 체제가 한반도를 넘어서 메콩강 하류와 중동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



해 향후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됨.

### ● 北 박의춘 외무상, 모스크바 도착(12/13)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3박 4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위해 12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음. 하루 전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한 박 외무상은 중국을 거쳐 이날 오후 4시 모스크바 세르메치예보 국제공항에 들어섰음.
- 모스크바의 추운 날씨에 대비한 듯 모피 털모자를 쓰고 두터운 외투를 입은 박 외무상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영재 대사 등 주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이어 귀빈실내 별도 대기실로 향했음. 박 외무상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가 ‘한국 기자다. 방러 목적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고 질문을 던졌으나 얼굴만 돌려 한번 기자를 쳐다봤을 뿐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음.
- 그는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 회견을 하셨는데 왜 한국 언론에는 한마디도 없으시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대기실로 들어갔음. 박 외무상을 수행한 북한 외교부 직원들은 질문을 계속하며 대기실로 따라 들어가려는 기자에게 ‘이러시면 무례합니다’라고 제지하며 역지로 문을 닫았음.
- 한편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오랫동안 주러 대사를 지낸 박 외무상이 방러 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은 13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은 박 외무상의 방러는 지난해 4월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면서도 양측이 구체적 안전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안전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유례없는 긴장 국면에 들어간 한반도 위기 사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통신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도 회담의 주요 안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음.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러·북 교역액은 5천만~6천만 달러였으나, 올해 교역액은 1억2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 통신은 이어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수를 늘리는 형태의 경제협력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보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는 임업, 어업, 건설 등의 분야에 걸쳐 약 6천~7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이밖에 양측은 국경 문제, 범인인도, 항공 수색 및 구조, 농업, 검역 등의 분야에 걸쳐 10여 건의 조약과 협정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관계

#### ● 한미, 오늘부터 FTA 합의내용 조문화 작업(12/17)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조문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 실무회의가 17일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됨.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벌이게 될 예정임.
-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미국측에서는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임. 양측은 연말까지 문서화 작업을 마친 뒤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가질 예정임. 합의문서에 대한 서명식이 이뤄지면 한미 FTA 협상국면은 완전히 마무리되며 양국은 각각 국내비준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됨.

#### ● 스티븐스대사 “한미FTA 균형적..합의 진전시켜야”(12/17)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1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각의 추가협상.재협상 요구와 관련, “지금 합의된 것이 균형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을 양국에 가져다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
- 스티븐스 대사는 오전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회장 이병석 의원)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관계와 FTA 비준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완벽함이 좋은 것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합의를 진전시켜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계가 이번 협정을 통해 더욱 강력해지고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티븐스 대사는 자동차 부문 협상결과에 대해 “이번 협정으로 한국(자동차) 업체의 미국시장 접근이 나아졌고 미국 업체의 한국시장 접근도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 미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균형 잡힌 협상이라고 본다”며 “한국내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 품질에 대한 신뢰(confidence)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늘어나기 바라고 개방을 바라지만 동시에 민감함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음. 그는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 전망과 관련,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경악스럽다”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함께 해야한다”고 촉구했음.



### ● 한미, 확장억제위원회 운용계획 서명(12/13)

- 한미 양국은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간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운용계획과 관련한 약정(TOR)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지난 10월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로 내년부터 본격 가동됨.
- 이 위원회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확장억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연간 두 차례 고위급 회의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한국 측 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며 미국 측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가 참가하는 첫 고위급 회의는 내년 2~3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현안 실무회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고위급 본회의에 건의하게 됨.
- 국방부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위협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확장억제의 신뢰성, 실효성, 지속성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SPI 회의에는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했음.
- 한미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호전적 도발행위가 재발하면 동맹차원에서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협의했음.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 추진과 주한 미군 재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 SPI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3개월 주기로 개최하는 정례협의체임.

### 나. 한·중 관계

#### ● 中, 연평도 훈련 반대 성명..“정세 위급”(12/18)

- 중국 외교부 장즈쥘(張志軍) 상무부부장이 1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천명했음. 장 부부장의 성명은 이날 새벽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의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입장 표명이 나온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것으로 발언 주체의 격을 높임으로써 한국 정부에 더욱 강한 반대



-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장 부부장은 이날 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중국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장 부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급하면서 고도로 복잡·민감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이에 관심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음. 그는 한반도에서 다시 유혈충돌이 빚어진다면 남·북한 국민에게 우선 재앙을 몰고와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연됨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 화가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음.
- 장 부부장은 긴장을 격화시키는 대신 완화시켜야 하며, 대항 대신 대화를, 전쟁 대신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강렬한 바람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
- 그는 “중국은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7천만 동포의 안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면서 추가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기를 강렬히 호소한다”면서 “남북한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장 부부장은 중국은 연평도 포격 이후 다이빙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남·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등 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잇따라 불러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 ● 中 “한반도 사태악화 행위 절대 반대”(12/18)

- 중국 정부는 18일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듭 촉구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연평도 훈련계획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중국은 한반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에도 견결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음.
- 장 대변인은 “한반도에 다시 긴장 국면이 나타난 데 대해 논평을 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한국의 연평도 훈련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채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진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음.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유관 당사국이 책임있는 태도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화되도록 건설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거듭 강력히 촉구했음.
- 장 대변인은 “한반도에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 그 재앙이 가장 먼저 남북한 인민에게 닥치지만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깨트려 주변국가에도 재앙이 미친다”며 한반도 위기상황이 중국에 미칠 부정



적인 영향에 우려를 표시했음. 그는 또 역내 각국의 인민들이 강력히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은 긴장이 아닌 긴장완화, 대결이 아닌 대화, 전쟁이 아닌 평화라고 강조했다.

- 한편 중국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음. 장즈진(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7일 오후 류우의 주중대사를 불러 연평도 사격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김외교 “한·중관계 구동화이로 나아가야”(12/15)

- 중국의 협력관계와 관련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북핵 및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중국연구센터 출범 기념식에 참석, 기초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주변국에게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와 우리함 농축설비시설 공개,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북한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에 제기하고 있는 안보위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지정학적 고려,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한·중 양국간 상시적인 의견교환과 긴밀한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장관은 또 “한·중 양국관계는 단순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며 “양국관계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로 이점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양국은 그간의 발전 성과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상호간 이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싱하이밍 “대화·협력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12/15)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리대사는 15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싱 대리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중국연구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과 함께 상호존중과 상호평등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구해나가기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싱 대리대사는 이어 한국말로 다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 손잡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중국은 평화발전을 지향하면서 대외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중국은 이웃의 모든 국가에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한국과 협력동반자 관계를 공고화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다민족국가로서 지역마다 자연조건과 발전수준, 생활습관, 언어가 다르며 복잡성과 다양성이 기본적 특징”이라며 “지난 30년간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라고 평가하고 “하지만 중국은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고 중국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中 다롄서 ‘韓-中 경제협력의 날’ 개최(12/14)

- 한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교역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한-중 경제협력의 날’ 행사가 14일 중국 랴오둥(遼東)반도의 거점 항구도시인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개최됐다.
- 주중한국대사관과 다롄시가 공동으로 개최, 다롄 푸리화(福麗華)호텔에서 15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시장 개척을 준비하는 50여 개 한국 업체들이 참가, 중국 기업들과 무역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건설과 IT, 신농촌, 환경 장비 등 다롄시의 역점 육성 산업에 대한 투자 설명회가 열려 양국 기업 간 경제 합작도 모색하게 됨.
- 행사 첫날인 14일 저녁에는 한국과 중국의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음식문화의 밤’ 행사가 열려 전통 한식을 중국인들에게 알렸다.

#### 다. 한·일 관계

#####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내일 서울서 개최(12/15)

- 한일간 경제·통상 관계 전반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일본측에서는 오타베 요이치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무역원활화 및 산업협력 강화 방안, G20(주요 20개국) 주요 합의사항 이행 협력,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



개발어젠다) 등 국제적인 관심사항, 양국간 무역·투자 애로사항, 비관세조치 해소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라. 미·중 관계

### ● <평행선 달린 美·中 한반도 해법>(12/17)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의 방중을 계기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양국이 17일 강조점이 다른 회담 결과를 각각 발표한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됨.
- 미국은 이날 주중 미 대사관을 통해 미 대표단의 방중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사태의 전개를 포함한 일련의 양자 및 지역 이슈에 관해 중국측과 의견을 나눴다”고 알맹이없는 성명을 냈고, 관영 신화통신은 앵무새처럼 기존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 레토릭을 반복했음. 신화통신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 대표단에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풀고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미 대표단의 이번 방중은 내년 1월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의제조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안화 환율절상과 이란핵 문제 등도 논의됐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사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그런 탓에 미 대표단도 이와 관련해 중국 측에 “책임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임.
-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달 9~13일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보고서 분석 결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기술 능력이 이란을 능가할 뿐더러 이를 방지할 경우 급속한 핵 확산이 우려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전언임.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초청으로 16일 방북한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 측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을 요청해 놓은데서도 미국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줌. 미국 민주당의 대북 메신저 격인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번에 개인자격으로 방문했다지만 방북후 그 결과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 때 미 CNN 방송의 입국 취재를 허락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음. 사실 원심분리기를 통한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과는 달리 포착이 어려울뿐더러 소규모 시설로도 농축이 가능해 ‘확산’이 용이하다. 그런 점이 핵 비확산에 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임.



- 따라서 미 대표단은 이번 방중에서 지난 2002년 10월초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을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와 북한의 본격적인 우라늄 농축 위협이라는 상황악화로 이어졌다는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 미 대표단은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포함해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의 다섯가지 항목을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 일본과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대화 요구에는 응하겠지만 북한이 성의를 갖고 진정성을 보이는 선행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임.
- 이에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6자 긴급협의 개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미국이 내건 '6자대화 재개 전제조건'에 지원할 의지를 그다지 비치지 않았다고 함.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 미 대표단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관련해 어느 '한쪽' 입장을 갖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탓에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견을 확인하고 탐색하는데 주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따라서 미 대표단이 귀국하고서 미 행정부는 중국의 입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의 해법을 '대화'로 할지 아니면 '제재'로 할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행정부는 특히 내년 1월에 후 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중국을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음. 아울러 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리처드슨 주지사가 미중 메신저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 스타인버그 美 대표단, 다이빙궈 면담(12/16)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16일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결과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표단이 다이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그동안 다이 국무위원으로부터 직접 북한의 북핵 외교 실무사령탑인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의 회담에 이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듣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음. 그러나 미 대표단과 다이 국무위원 간의 회동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음.



● 中 “중미, 차이를 갖고 다뤄선 안돼”(12/16)

-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차이를 갖고 다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외교부의 추이텐카이(崔天凱) 미주 담당 부부장, 장즈쥘(張志軍) 상무부부장과 각각 회담했으며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고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회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일각에서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장 대변인의 이런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볼 때 핵심의제인 한반도 위기 사태와 관련해 미중 양측의 해법이 팽팽히 맞선 것이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그는 그러면서 “중미간 고위급 대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해 유익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장 대변인은 아울러 미중 고위급 대화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중국은 9.19 공동성명과 북핵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며 유관 각 측이 함께 노력해 인내심을 갖고 정세를 완화하면서 협상의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음.

● 스티븐스 대사 “中, 北문제에 더 큰 역할해야”(12/15)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초청으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응당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데 중국이 강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함께 북한에 그들이 가진 목적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더는 이런 도발을 해서 안 된다는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평양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헌신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서는 “한·미 FTA는 21세기에 두 나라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며 “이번 협정 체결의 가장 큰 승리자는 양국의 소비자”라고 말했다.
- 한편,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의 분단은 20세기 가장 아픈 비극 중 하나”라며 “이것은 한국인의 책임이 아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미국 정부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모든 한국인이 납득할 수 있는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 ● 美 스타인버그 방중, ‘對中 압박수위’ 높여(12/15)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14일 북한의 잇단 도발 등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 협의 차 중국 방문 길에 올랐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7일까지 계속될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로서 전했다면, 이제부터는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이 중국에 전하면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소식통은 한·미, 미·일간의 군사훈련과 한·미·일 동맹 강화, 한반도에서의 전력 강화 움직임 등이 모두 중국의 안보이익에는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한단계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미 대표단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우리농축축 시설 공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다음달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시 논의될 미·중 정상회담 의제도 논의할 예정임. 미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외교분야 의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최근 상황을 포함한 양자 및 역내 문제들에 대해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당초 이번 대표단에 포함됐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심각한 축농증 증세로 이번 방문에 동참하지 못했으며, 내년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롤리 차관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중에는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과 성 김 6자회담 특사 등만이 수행하게 됐다.

### ● 中 양제츠 “美와 ‘윈-윈’ 해야” 강조(12/13)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미국과의 ‘윈-윈(win-win)’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 부장은 12일 베이징(北京) дя오위타이(釣魚臺)에서 중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5년내 중국이 직면할 국제정세 가운데 우선 미중 관계를 언급하며 “협력적이고 윈-윈이 돼야 하며 제로섬(zero-sum) 게임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3일 보도했음.
- 그는 “세계화 시대에 중미 양국은 서로 이해관계가 깊게 연관돼 평등과 상호 신뢰속에서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언급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이 14~17일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고위급 안



- 보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양 부장은 그러면서 “양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하려면 우선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그동안 대만과 티베트, 그리고 남중국해와 서해를 자국의 핵심이익권이라고 주장해온 점에 비춰 그의 이 발언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공격적인’ 접근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됨.
  - 그는 아울러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과 연평도 선제 포격으로 비롯된 한반도 위기사태와 관련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약의 대안이라는 기존 중국 정부 입장을 확인했음. 그는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으로, 유관 각국은 이 대화의 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이 6자 긴급협약을 개최할 적기”라고 말했다.
  - 한편, 양 부장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올해 상하이(上海) 엑스포를 포함해 여러가지 대형 국제행사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며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의무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음. 그는 특히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핫이슈로 떠오른 지구 온난화 문제를 대처하는데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이어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정상회의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빈곤지역인 아프리카 경제 재건과 사회간접시설 건설 등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소개했음. 양 부장은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은 중국 인민들만의 관심이 아니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라며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국제문제와 국제질서에서 개발도상국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 미·일 관계

##### ● 日총리, 오키나와 찾아 미군기지 ‘현내이전’ 호소(12/17)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7일 오키나와(沖繩)현을 방문해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지사에게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현 안에서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현내 이전은 무리’라는 대답을 듣는데 그쳤음.
- 간 총리는 이날 오키나와현 청사에서 나카이마 지사를 만나 민주당 정권이 약속한 ‘후텐마 기지 현외·국외 이전’을 실현하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했음. 또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을 미·일 양국이 합의한 대로 같은 현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면 차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현내 이전에 동의해주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할 약 5천억엔의 일괄 지방 교부금 중 250억엔 이상을 오키나와에 배분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음.

- 하지만 나카이마 지사는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고, 회담 후 기자단에 “(총리가 한) ‘차선’이라는 말은 틀렸다.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음. 간 총리는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방미 전에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결론 내길 원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와 오키나와현 간의 주장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바. 중·일 관계

### ● <中, 日신방위계획대강에 왜 민감할까>(12/19)

- 중국이 일본 정부의 신방위계획대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우선 북한과 더불어 자국에 대해 사실상 위협 대상으로 분류하고 한국,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한 신방위계획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함.
- 중국은 특히 근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빌미로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참가시킨 가운데 서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되는데 이어 일본이 신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는데 주목하고 있음.
- 앞서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이달 상순 실시된 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사실상 닌슈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방어를 강화하는 훈련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6년만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서남(西南) 전략’을 펼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음.
- 중국은 아울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돌출 발언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었음. 중국 언론은 간 총리의 발언이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가 한·미·일 군사 협력과 3각 동맹 추진 의지도 담긴 것으로 분석했음.
- 중국은 미국과 일본 양국이 1990년대 이후 미일 안보선언과 주변사태법, 유사법제 등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기지 사용은 물론 병참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해왔다. 중국은 또 한미일 3국이 ‘동맹’을 추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음.
- 집단적 자위권은 북한이 한국과 그 동맹인 미국을 공격하면 일본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참전까지도 하겠다는 개념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참전의 명분도 될 수 있음. 실제 미일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협력 계획으로 ‘작전계획 5055’를 마련중임.



- 여기에는 일본 자위대의 임무로 조난당한 미군 수색·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 북한 공작선 침투에 대비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및 초계기 활동, 조기경보 정보 수집 및 C-130 수송기를 이용한 한국 내 일본인 소개작전 등이 규정돼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지난 2004년 12월 4일자에서 보도한 바 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올들어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위협,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위기고조 사태 속에서 일본이 신방위계획대강을 통해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안보적 긴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 中, 일본 신방위대강 비판(12/17)

-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방위계획대강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신방위대강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개별 국가가 국제사회의 대표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음. 장 대변인이 지칭한 ‘개별 국가’는 맥락상 일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됨.
- 장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 전략을 굳건히 고수하면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음. 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공통 번영의 거대한 기회를 제공했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본 사실”이라고 덧붙였음.
- 장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는 일본의 신방위대강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펴고 있어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일본과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신뢰를 강화하고 싶다”며 다소 유화적인 어조로 답변했었다.

### 사. 기 타

#### ● 한·일·중 ‘협력사무국’ 협정..3국협력 가속(12/16)

- 한·중·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 협력사무국이 내년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협정 서명식을 가졌음.
- 협력사무국은 2009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내년 중 우리나라에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번 협정은 3국 정부간 체결되는 최초의 조약으로 3국



- 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 중 협력사무국이 공식 출범하게 됨.
- 사무국 설치 장소는 인천 송도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초대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대사급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사무국은 앞으로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주요 회의 참석 및 3국간 연락 ▲신규 협력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 및 3자위원회에 실적보고서 제출 ▲3국협력 이슈 연구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사무국은 임기 2년인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임명되는 사무총장은 3국이 번갈아 맡게 됨. 또 사무국은 ▲법적 소송절차 면제 ▲공관 불가침 ▲통신 보호 ▲문서불가침 ▲펀드와 통화 보유 ▲송금 및 환전 기능 등의 특권면제를 누리고 직원의 경우 소득세, 출입국 제한 면제 등의 특권이 주어짐.
  - 김 장관은 축사에서 “이제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3국간 조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한 3국협력의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김 장관은 또 “협력사무국이 내년에 설립되면 3국 협력이 양적으로 확대될뿐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국간 발전은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토 대사는 “3국 협력사무국 설립으로 일본, 한국, 중국의 협력 프로젝트가 가속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미래지향적인 3국 협력이 보다 넓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장 대사는 “중·한·일은 아시아의 주요국가로서 3국 협력은 지역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력사무소 체결은 3국 지도자들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중요한 계기로서 3국 협력이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음. 중국에서 휴가 중이던 장신췌 대사는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한국에 일시 입국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 외교부 관계자는 “3국은 협력사무국 서명으로 협력관계가 한층 확대되고 한·일·중간 긴장 요소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3국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음.